The Korean Educational Administration Society

제 128 호 / 발행일 2016년 10월 31일 교육행정학연구 별책

한국교육행정학회 소식지

THE NEWSLETTER

발행처 한국교육행정학회(www.keas.or.kr) / **주소** (02841) 서울 성북구 안암로 145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본관 213호
발행인 신현석 / **편집인** 주영효, 정수현, 장아름, 홍세영, 김혜연, 안지윤 / **TEL** 010-6444-0805 / **E-mail** keas1967@hanmail.net

학회의 활동사항 및 학술대회 개최, 학회관련 업무는 홈페이지(www.keas.or.kr)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주론 |

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한국 교육행정의 숙제

장 덕 호 | 상명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1.

4차 산업혁명의 파고가 높아지고 있다. 1784년 증기기관의 발명과 기계장치를 통한 제품 생산 시작(1차 산업혁명), 1870년 전기동력에 기반한 대량 생산 체제 형성(2차 산업혁명), 1969년 전기기술과 IT를 결합한 생산 자동화(3차 산업혁명)에 이어 바야흐로 4차 산업혁명기에 돌입하게 되었다. 4차 산업혁명은 디지털과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과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을 기반으로 사이버 세계와 물리적 세계를 네트워크로 연결한 지능형의 가상-물리시스템(cyber-physical system)이라고 할 수 있다(세계경제포럼, 2016). 이러한 신세계에서는 상상 이상으로 생산관계와 사회시스템 변화의 주기가 빨라지게 되고, 산업, 고용, 생활양식에 적지 않은 충격이 가해지고 있다. 대체로 일자리 축소 문제가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 자동화와 인공지능으로 15개 국가에서 5년간 71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20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되어 순수하게 500만개의 일자리가 줄어들게 되고(세계경제포럼, 2016), 10-20년 내에 현재 직업의 47%가 자동화에 의해 대체될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Frey & Osborne, 2013). 또 2011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의 65%는 그들이 대학졸업할 때(2027년) 현재 존재하지 않는 직업을 갖게 될 것이라는 놀라운 예측도 있다(Rosen, 2011), 특히, 보스톤컨설팅그룹(Sirkin, Zinser, & Rose, 2015)은 산업용 로봇 채택에 가장 적극적인 한국은 2025년까지 제조업 노동력의 40%를 로봇으로 대체하고, 향후 10년간 인력의 33%를 감축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이러한 산업 고용 측면에서의 변화는 인간 삶의 모습도 변화시키고 있다. 종래 산업혁명기에서는 각자가 주어진 영역에서 자신이 속한 집단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과업을 충실히 도모하면 그것으로 충분하였지만 미래사회에서는 자아실현을 원하는 독립 노동자들이 4차 산업혁명기의 핵심기술인 인공지능과 증강현실을 기반으로 장르를 파괴하여 서로의 삶에 해결사가 되는 초상식 사회로 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김경훈, 2016). 따라서 이러한 사

회에서 종래의 은행, 증권, 보험, 세무, 구매 등과 같은 일상적이며, 매뉴얼에 의존하는(routine & manual) 직업들의 비중이 낮아지고, 비일상적이며 인간관계적(non-routine & interpersonal)인 직업들이 각광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세계경제포럼, 2016).

이러한 신세계에 요청되는 인간의 능력이란 어떤 것일까? 세계경제포럼(2016)은 가까운 장래인 2020년에 필요한 Top 10 역량으로, 복잡한 문제의 해결 능력, 비판적 사고력, 창의력, 인간관리능력, 타인과 조정능력, 감성역량, 판단과 의사결정능력, 서비스지향성, 협상력, 인지적 유연성을 꼽은 바 있다. 이를 키우기 위해 대체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주문을 하고 있다. 첫째, 칸막이식 사고의 틀을 벗어나 다양한 생태계를 포용·통합할 것, 둘째, 협력적이고 유연한 구조를 만들어 공동의 담론을 만들어낼 것, 셋째, 관용, 존중, 배려와 연민을 키워나가기 위해서 지역적, 국제적, 국가적 차원의 지속적 협력과 대화를 할 것, 넷째, 이를 통하여 인간 중심의 공익을 위한 공동의 책임의식을 키워나가야 할 것 등이 그것이다.

2.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듯 세계경제포럼이 주문하는 이러한 인간능력과 정책 및 제도상의 변화 요구는 작금의 우리 교육현실에도 적지 않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교육현실은 어떨까? 우리 학교 교육은 과연 이러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을까? 얼마 전 일원으로 참여한 연구(김도훈 외, 2016)에서 교육과 과학분야 전문가들과 고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들을 인터뷰한 적이 있었는데, 우려스러운 현실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많은 이야기들을 분석·축약하면 대체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발견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우리 교육은 입시만을 지향하는 지식의 도구화가 심화되면서 학습 과정이 탈맥락화(decontextualized)되어, 학습 본질에 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이를 뒷받침할 비판적 사고의 발현을 돕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불편한 사실이지만 아이들의 '생각'이 거세되어 있고, 창의성보다는 '목표지향적 근면성'이 강조되면서 '자기주도'라는 키워드가 곧 순응의 내면화를 완성하는 모순을 연출하고 있다. 학습의 목표 자체가, 입시와 취직 이후의 안락한 삶을 보장하는 것 이상의 건강한 사회적 가치 혹은 상상력과는 동떨어져 있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은 학습 과정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행복감으로부터 소외된 채 불만과 긴장, 스트레스 상황 속에서 건강한 관계 형성과 소통의 기회를 잃고 있다([그림 1] 참조). 향후 이들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판단력과 정서적 이해의 장애를 지닌 채 단지 주입된 목표 가치, 체화된 경쟁 의식, 자신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표상에 따라 선택적으로 동원하는 정보의 양을 '진리'로 오독할 위험성도 적지 않다. 한마디로 4차 산업혁명기에서 필요한 인재의 모습과 그러한 인재를 기르기 위한 국가사회적 대처방향과는 근본적으로 유리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한 바람직한 미래 인재는 어떠한 모습이어야 할까? 미래를 전망하는 전문가들의 견해를 두고 보았을 때, 4차 산업혁명기 우리가 구현해야할 인재의 모습은 결국은 '협력적으로 생각하는 주체'이어야 할 것이다. 기존 교육 체제에서 '지식의 도구화'와 궤를 같이 하는 '학습의 탈맥락화'에 대응하여, 미래 인재의 학습은 비판적, 인식론적 사고를 도와주며, 각자의 생활맥락과 상호주관성 인정에 기반하여 학습을 성장의 기반으로 삼을 수 있도록 유도해내야 한다. 이 연구에서 우리는 경험 기반 학습 능력, 자기 표현력, 지식의 유기적 연결 능력, 협력적 문제해결 능력, 소통적 태도, 글로벌한 이해력, 공감과 상호작용 기반의 신뢰형성 능력, 가치 중심적 사고력,

비판적 사고력을 통해 구성되는 행위주체성을 '협력적으로 생각하는 주체' 형성을 위한 일반 역량으로 도출하였다([그림 2] 참조).

[그림 1] 현재 아이들의 학습과 정체성

[그림 2] 미래 아이들의 학습과 정체성

3.

교육행정은 4차 산업혁명, 아니 그 이후의 삶을 자신 있게 살아갈 우리 아이들을 길러내는 제도적 토대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 교육 행정은 다가온 4차 산업혁명기에 우리 학생들을 키우기 위해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을까? 많은 영역에서 행정의 변화가 현실을 따라잡지 못하는 이른바 '개혁의 지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아이들은 이미 첨단의 기기로 가상의 공간을 자유자재로 넘나들고 있는데, 교실 속 수업풍경은 20세기 초중반의 수업 그대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교직의 자부심과 보람으로 충만해야할 교사들은 늘어나는 사무처리와 '문제아들'에 대한 생활지도로 바쁘고, 행정가들은 관료적 시스템 속에서 주어진 과업만을 충실히 실행하는데 골몰하고 있다. 무엇부터 어떻게 변해야 할까?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관점에서 인재육성 전략을 도출하자' 라던가, '교육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자' , 또는 '전체 교육시스템을 재설계하자' 등등 거친 주장들이 있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자는 논의는 찾아보기가 어렵다. 이에 4차 산업혁명기에 돌입한 우리나라 교육행정의 발전을 위한 근본적인 숙제를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오랫동안 자리잡아온 교육행정의 재개념화가 필요하다. 그동안 가장 광범위하게 우리 교육을 지배해온 개념은 "교육이 인간행동의 계획적 변화" 라는 것이고, 따라서 교육행정의 모습도 다분히 시스템에 기반한 '투입-과정-성과' 라는 절차에 집중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위와 결과의 유리 현상을 지적하는 "느슨한 결합" (loosely coupled) 또는 "분리" (decoupling) 현상 등은 학습현장에서 발생하는 현실적 능력 함양(capacity building)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모든 문제를 교육자, 즉 공급자의 시각으로 환원시켜 버린다. 결과적으로는 교육행정은 끊임없이 이루어지지만 학습성과와 교수행위의 결과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일만 반복되게 된다(교육개혁패널, 2007). '00사업' 또는 '00프로젝트' 라는 이름으로 시행되는 크고 작은 교육시책들이 '과연 얼마나 의미있는 교수-학습의 변화를 가져왔는가' 라고 물어본다면 얼마나 많은 행정가와 교육자들이 자신 있게 답할 수 있을까? 학습이 맥락화되고, 상호주관성이 중요해지는 4차 산업혁명기의 교육행정은 교수자와 학습자, 학습자와 학습자 사이의 활발한 커뮤니케이션에 기초한 학습 활동을 조력하는 방향으로 새롭게 규정되어야 하고, 이러한 새로운 정의 위에서 교육행정의 원리와 질서, 형식과 내용을 재확립하여야 한다.

둘째, 교육행정의 곳곳에 자리 잡은 행정관료제의 유습과 모순을 극복하여야 한다. 한국 교육행정의 발전과정에서 행정관료제는 통일성, 일관성, 효율성 등 관료적 수단 가치들에 기초하여 적지 않은 성과를 일구어 냈다. 그러나 이로 인한 교육행정 전반의 획일성 확대, 교육주체들의 자율성과 창의성 위축 등은 날로 진보하는 새로운 세계에 대한 대처에 걸림돌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1990년대 중반 이후 한국 교육행정을 지배해온 '5.31 교육개혁' 이 실질적 개혁 의제를 도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비판받아온 이유는 바로 관료적 힘에 의존한 개혁이었음은 공히 인정하는 바이다. 교육행정 영역에 침투한 관료주의는 민선 교육감 체제가 들어섰음에도 별로 나아지지 못하고 있다.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 영역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프로젝트기반 행정의 폐해는 시작부터 이미 어느 정도 예견된 사실이었다고 할 것이다. 책무성 확보라는 미명아래 진행되는 수많은 평가들, 재정지원을 조건으로 만들어지는 새로운 규제와 교육본질에 배치되는 관행들, 관청의 권위 확보를 위해 개최되는 각종의 의례와 형식 등이 많아질수록 교실 속 교수-학습력의 신장과 높은 수준의 학문연구를 위한 자유와는 거리가 먼 공급자위주의 행정이 되고 만다. '협력적으로 생각하는 주체' 로서의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서 교육행정은 어느 행정 부문보다도 더욱 칸

막이식 사고와 관행에서 벗어나 협력적이고 유연한 방식으로 움직여져야 한다.

셋째, 관치를 대신할 교육행정은 교육당사자주의에 입각한 실질적 법치의 모습을 가져야 할 것이다. 현행 「교육기본법」은 제2장에서 교육당사자의 법적 지위를 일일이 열거하고 있다, 즉, 학습자(제12조), 보호자(제13조), 교원(제14조), 교원단체(제15조), 학교 등의 설립·경영자(제16조), 제17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리 및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개별 법령이 「교육기본법」의 취지를 받들어 얼마나 이들의 법적 지위의 보호와 인정을 위해 그 권리와 의무를 구체화시켜 왔는지는 의문스럽다. 예를 들어, 「초·중등교육법」은 교육행정 제도와 체계를 앞세운 관료적 규제 위주로 편제되어 있고, 「교육기본법」 보다 더욱 진전되고 구체화된 형태로 학생, 교사, 학부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교육당사자로서의 권리와 책임은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동법이 학생의 법적 지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것은 자치활동(제17조), 징계(제18조)에 관한 사항 뿐이라는 점도 놀랍고, 학생의 인권보장(제18조의 4)을 규정하고는 있지만 이를 단 한 줄의 문장으로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으로 환원시켜버린 대담함은 더욱 놀랍다). 또한 이러한 규제와 제도위주의 입법 관행은 각급 학교 운영의 기본 규범이라고 할 수 있는 「학칙」에도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다. 결국 우리 교육법규범에는 교육 당사자 사이의 구체적인 권리 및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이러한 미비에 대한 대응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인권을 비롯한 각종 조례들을 제정하고, 이로 인해 법률의 제·개정권을 가진 중앙행정당국과 조례를 제정한 자치단체들 사이의 갈등도 자주 보아왔다. 이러한 미비된 입법체계와 관행 속에서 실질적 법치주의의 정신은 훼손되고, 교육당사자의 권한과 책임은 등한시되어 왔다. 아쉽게도 이 미비된 틈새를 파고든 관치행정 질서의 광범위한 확산은 어쩌면 우리 입법체계의 한계가 노정한 자연스러운 결과물인지도 모른다.

넷째, 교육과정의 수권체계의 근본적 변화가 시급하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4차 산업혁명기의 인재는 교과서 상의 지식을 많이 암기하고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러나 여전히 학교현장은 국가-교육감-학교장 등 위계적 행정구조 속의 최일선 작업계층(front-line worker)으로서의 교사가 국가교육과정 속에 규정된 '진도'를 실행하는 수업과 규격화, 표준화된 평가 위주로 진행으로 점철되어 있다. 규정된 교육과정 속 진도만 나가면 거기서 역할은 멈추고, 그 학생들의 실질적 성취 여부는 문서 속에서 체크만 될 뿐이다. 이러한 교육과정 수권구조와는 달리 대부분의 서유럽 내지 북유럽국가들에서는 국가가 교사에게 교육과정문서를 직접 교부하고 그 교육과정문서를 해석하고 구체화하고 관련한 학습자료를 구성하는 온전한 수업에 관한 권한과 책임은 바로 교사에게 부여되어 있다(교육개혁패널, 2007).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에서 추진된 일련의 개혁조치들, 예를 들어 '교육과정 자율화' '디지털 교과서 확대' '수석교사제' '문·이과 통합 교육과정 도입' 등은 마치 우리 교육과정이 유럽형인 것인 양 오해하고 있는 상태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 교육과정 플랫폼과는 어울리지 않는 조치들이다보니 모순과 혼선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교육과정을 자주 바꿀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현실과 미래 인재 양성의 목표에 맞게 교육과정을 실행하는 플랫폼을 바꿔야 하는 것이다. 교육과정의 실행을 모두 교사에게 위임하는 교육과정 수권체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통해서만이 앞서 언급한 미래 학생의 정체성은 새롭게 확보될 수 있고, 4차 산업혁명이 요구하는 인재가 만들어질 수 있다. 비로소 장학진, 학교장, 교사의 역할이 변할 것이고, 교과서 성격 역시 변화될 수 있을 것이다. 교원의 리더십과 전문성 향상(professional development), 장학(supervision)과 교원평가, 승진제도 개선 등의 현안 과제들은 이러한 교육과정 수권체계 변화 위에 온전히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제시한 문제와 개선의 방향은 그 각각이 논쟁거리라고 할 수 있고, 총론에서는 문제의식을 공유하더

라도 각론을 위한 구체적 대안을 탐색하는 데에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어쩌면 교육행정의 각 분파를 넘어서 교육학 전반의 전문가들의 중지를 모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미래를 살아갈 우리의 아이들에게 더 나은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하는 교육행정 본연의 과업을 생각할 때 변화를 위한 논의는 많을수록 좋을 것이고, 한시라도 서두를 수 있다면 그 혜택은 빨리 아이들에게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교육개혁패널(2007). 대한민국 교육개혁의 선진화 구상과 실천. 한반도선진화재단.

김경훈(2016). 4차 산업혁명과 기술 트렌드.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미래교육 포럼 발표문.

김도훈, 한경희, 장덕호(2016). 2030 미래 사회 인재상 및 핵심 과학역량 마일스톤 연구. 한국과학창의재단.

Frey, C.B., & Osborne, M.(2013). The future of employment: How susceptible are jobs to computerisation? http://www.oxfordmartin.ox.ac.uk/downloads/academic/The_Future_of_Employment.pdf.

Rosen, R.(2011). Project Classroom: Transforming Our Schools for the Future. The Atlantic, 2011.8.29.일자.

Sirkin, H., Zinser, M., & Rose, J.(2015). The robotics revolution: The next great real in manufacturing. Boston Consulting Group.

World Economic Forum(2016). The Future of Jobs: Employment, Skills and Workforce Strategy fo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http://www3.weforum.org/docs/WEF_Future_of_Jobs.pdf.

| 논단 |

신자유주의의 제도적 맥락화: 고등교육을 중심으로*

김 양 선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선임연구원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은 1990년 이후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이 도입, 시행되면서 많은 변화를 겪어 왔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 전 세계 여러 국가의 고등교육 제도에 유사하게 나타난 변화의 흐름이기도 하다. 일부 국가는 선진국의 제도를 선택적으로 모방하기도 하고, 동시에 각자의 역사, 문화적 배경에 따라 이를 고유의 방식으로 해석하여 제도로 정착시키기도 하였다. 이러한 배경아래 세계화와 더불어 신자유주의가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맥락 속에 어떠한 형태로 제도화되어 왔는지 정리해보고자 한다.

신자유주의에 대한 담론은 자유주의와의 유사성과 차별성을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두 개념의 가장 큰 차이 중 하나는 전통적인 자유주의가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는 대상으로서의 개인에 대하여 행해지는 국가 권력에 부정적인 반면, 신자유주의는 적절한 시장을 형성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에 대하여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Olssen & Peters, 2005). 신자유주의의 특징에 대한 연구(Martinez & Garcia, 1997)가 진행되었으나, 이 글에서는 신자유주의의 실제적인 특징을 분권화와 민영화, 평가주의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고등교육 제도에 나타난 정책의 시행과 제도의 변화를 통해 살펴보도록 한다.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맥락에서 신자유주의가 제도적으로 구체화되어진 현상을 파악하기에 앞서 신자유주의의 특징과 관련된 개념들을 정리해보면, 분권화란 권력이나 의사결정권이 중앙에 집중되지 않고 하부 조직으로 분산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사회적, 정치적 긴장 관계를 이완시키고, 지역의 문화·정치적 자율성을 향상시키는 방법으로 간주된다(Bardhan, 2002). 또한 민영화란 어떤 활동 또는 자신의 소유에 있어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고 사적 부문의 역할을 증대시키는 행위를 의미하며(Savas, 1989), 마지막으로 평가주의란 매사에 사람이나 사물의 가치나 수준 따위를 일정한 기준에 의해 따져 매기려는 주장이나 노력으로 정의할 수 있다.

먼저 신자유주의의 특징으로서의 분권화는 탈규제 및 자율성 확보와 관련이 있으며, 특히 정부 규제와 대학의 자율성은 서로 상반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정부의 규제가 많아질수록 대학의 자율성이 감소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의 경우, 초기부터 중앙집권적 형태의 제도적 요소가 강했고, 이러한 특징은 초·중등 교육 단계에 국한되지 않고 고등교육 단계에서도 나타났다.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는 정부의 규제를 완화하고 시장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고등교육에서의 규제완화 정책을 시행하였다. 특히 1995년 5.31 교육개혁방안을 통해 규제완화에 대한 내용이 상당 부분 제기되었으며, 이에 부응하기 위해 교육규제완화위원회

* 이 글은 김양선(2015) "제도적 맥락에서 본 대학교수의 학술활동 분석" 박사학위 논문의 일부를 발췌하여 요약·정리함

가 설치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고등교육 규제완화의 대표적인 예는 대학 설립 준칙주의를 제도화한 '대학설립·운영규정' 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학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접근으로는 학사·학생 선발의 자율화, 학생정원 자율화, 교원인사의 자율화로 구분할 수 있으며, 대학의 자율성 확보는 대학의 설립주체에 따라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 사립대학의 자율성은 이사회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진 반면 국·공립대학의 자율성 확보를 위한 대표적인 정책은 국립대학의 법인화로서, 서울대학교가 그 첫 번째 사례이다. 2002년 「국립대학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예산배분에 있어 대학의 책임과 권한 아래 자율예산을 편성하도록 하였다.

신자유주의로 인한 제도 변화의 두 번째 특징은 민영화이다.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민영화는 시장화와 기업가주의(entrepreneurialism) 측면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 국·공립과 사립대학을 불문하고 성과에 대한 보상을 강조하고 경쟁원리에 기반을 둔 선택과 집중에 의한 재정 투자 등에서 시장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고등교육에서의 시장화는 경쟁원리를 바탕으로 하는 선택과 집중의 재정 투자로 구체화되었다. 정권의 고등교육 정책 기조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문민정부부터 현 정권에 이르기까지, 대학에서는 경쟁의 논리를 주축으로 책무성 논의가 함께 이루어져 왔다(김수경, 2012). 특히 대학재정지원사업으로 대표되는 Brain Korea 21 (BK 21), World Class University(WCU), 학부교육선도대학육성사업(ACE), 대학특성화사업(CK), 산업연계교육활성화선도대학사업(PRIME) 등을 통해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경쟁을 통한 선별적 재정투자 기조를 유지하여 왔다.

신자유주의의 민영화에 대한 특징은 대학에서 기업가주의에 기반한 활동을 강조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대학의 기업가적 활동이란 사회에 대한 대학의 책무를 증진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고 할 때 기업가주의는 기업가적 활동에 대학이 관여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Yokoyama, 2006). 대학의 기업가적 활동의 대표적인 예로 지식 이전, 지적재산권 보호, 산학협력 등이 있다(Mars & Rio-Aguilar, 2010). 우리나라 대학에서도 산학협력 활동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대학에서도 지식재산을 보호하고 지식 이전을 통한 사회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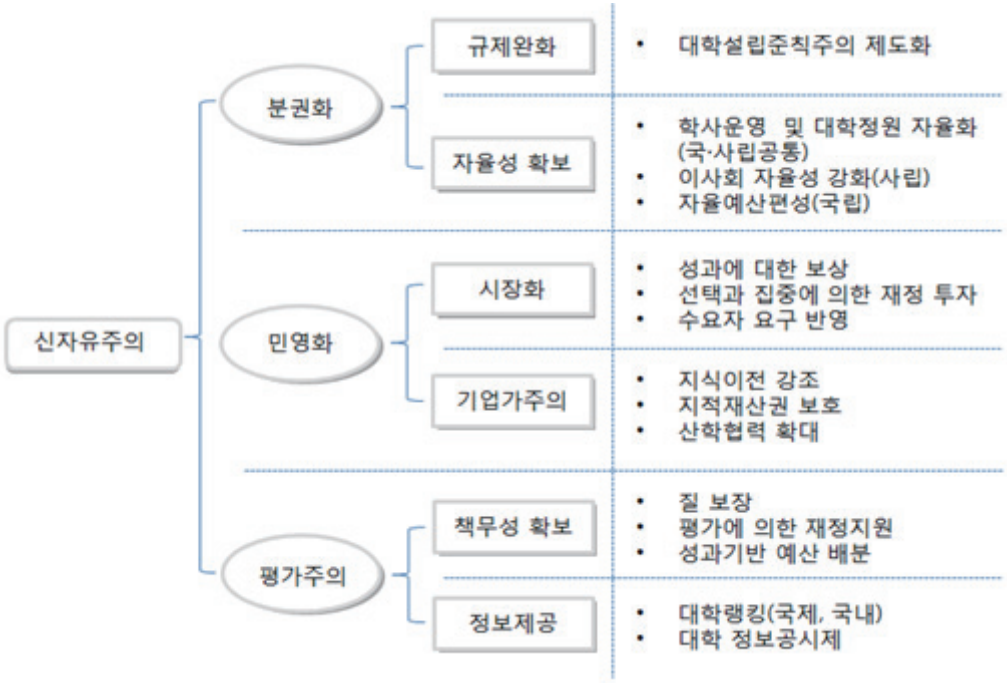
신자유주의의 평가주의적 특징은 고등교육의 책무성 확보와 정보제공 측면에서 구체화되었다. 책무성의 확보는 분권화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과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정부의 규제완화로 대학 자율성이 향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학의 책무를 묻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로 대학의 산출물 즉 성과를 기반으로 하는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평가주의적 관점에서는 평가를 통한 책무성 확보가 중요하며, 대학의 책무성 확보는 대학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과 관련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실험대학평가(1972-1980),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평가(1981-1991), 대학평가인정제와 재정지원 대학평가(1994-2006), 자체평가 및 기관평가인증과 재정지원 대학 평가(2007-현재)로 이어져 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고등교육에서 평가주의가 가장 극단적으로 제도화 된 예는 정부주도의 대학구조개혁평가라 할 수 있으며, 평가를 통한 정원과 재정지원의 감축을 대학에 시도하고 있다.

신자유주의에 기반한 대학에 대한 평가는 수요자와 사회에 대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제도화되었다. 더 이상 상아탑으로서의 대학이 아니라 경쟁을 통한 재원과 학생을 확보하기 위해 수요자와 사회에 정보를 제공해야만 하는 것이다. 대학에 대한 정보의 제공은 국가 안에 한정되지 않으며 세계화 흐름에 따라 그 범위가 전 세계로 확장되었다. 특히 언론기관을 통한 세계대학순위 발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대학 경쟁력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로 인식되고 있다. 정보제공에 있어 우리나라는 2007년 5월 「교육관련기

관의정보공개에관한특례법」을 제정하여 대학정보공시제를 시행하였다. 이를 통해 수요자들의 알 권리를 보장할 수 있으며, 대학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으나 대학 간 경쟁을 심화 시킬 수 있으며, 또 하나의 평가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공시 항목과 산출 기준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신자유주의가 우리나라 고등교육 제도에 어떻게 적용되고 제도적 맥락을 형성해 왔는지 신자유주의의 속성과 그에 따른 고등교육의 변화를 통해 살펴보았으며, 이를 정리하면 [그림 1]과 같다. 신자유주의가 가지는 분권화와 민영화, 평가주의라는 큰 틀 안에서 규제완화와 자율성 확보 측면에서의 분권화, 시장화와 기업가주의의 측면에서의 민영화, 책무성 확보와 정보제공 측면에서의 평가주의로 세분화하여 이에 따른 고등교육에서 시행된 정책과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향후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사회·문화적 그리고 역사적 맥락에서 신자유주의 정책의 공과에 대한 가치 판단은 별도의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근본적으로 신자유주의에 대한 이론적인 논의를 바탕으로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세계화와 더불어 거대 담론이 된 신자유주의가 실제 우리나라 고등교육 맥락에서 어떻게 제도적으로 구체화 되었는지에 대한 연구가 다양한 접근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림 1] 우리나라 고등교육에서의 신자유주의의 제도적 맥락화

참고문헌

김수경 (2012). 정부 대학재정지원의 방향과 과제. 교육재정경제연구, 21(1), 1-28.

Bardhan, P. (2002). Decentralization of governance and development.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16(4), 185-295.

Mars, M. M. & Rios-Aguilar, C. (2010). Academic entrepreneurship (re)defined: significance and implications for the scholarship of higher education. Higher Education, 59(4), 441-460.

Martinez, E. & Garcia, A. (1997). What is Neo-liberalism: A brief definition for activists. http://collectiveliberation.org/wp-content/uploads/2013/01/What_Is_Neoliberalism.pdf

Olssen, M. & Peters, M. A. (2005). Neoliberalism, higher education and the knowledge economy: from the free market to knowledge capitalism. Journal of education policy, 20(3), 313-345.

Savas, E. S. (1989). A taxonomy of privatization strategies. Policy Studies Journal, 18(2), 343-355.

Yokoyama, K. (2006). Entrepreneurialism in Japanese and UK universities: Governance, management, leadership, and funding. Higher Education, 52(3), 523-555.

| 논단 |

교육책무성 정책과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간의 관계[1]

김 영 식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

1. 들어가며

국가 차원의 교육력과 경제성장 간의 관계에 대한 인식 확대와 PIRLS, PISA, TIMSS 등의 국제학업성취도평가 시행은 각 국가들로 하여금 국가경쟁력 제고라는 비전 아래 학업성취도 향상을 위한 치열한 경쟁 및 정책적인 노력을 이끌어내고 있다(김지은, 김지하, 2012; 박소영, 김준엽, 성기선, 2010; Wößmann, Luedemann, Schütz & West, 2009).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우리나라 또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의 전수평가 전환(2008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기반한 학력향상중점학교 사업 실시(2009), 학교알리미를 통한 학교별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결과 공시(2010년) 등의 정책을 통하여 단위 학교의 책무성 강화를 통한 학업성취 수준 제고라는 전 세계적인 교육개혁 흐름에 동참하고 있다.

교육책무성 정책을 시행하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주인-대리인 모형(Principal-Agent Model)에 따라 국민과 정부를 주인으로, 학교를 대리인으로 상정하여 책무 이행의 주체를 단위 학교로 설정한 후 이들을 대상으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제고를 위한 각종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상과 같은 대리인에게 부과하는 책무성 기제를 통하여 주인인 국민이나 정부가 원하는 정책 목표, 즉 학업성취 수준 및 교육경쟁력의 제고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치밀한 유인 설계와 감시 체계의 구축을 통하여 책무성 정책을 시행하더라도 대리인의 자원 제약 문제가 상존함을 고려할 때 의도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은 물론, 의도한 정책 효과가 나타나더라도 의도하지 않은 결과 또한 나타날 가능성이 상존한다(정동욱, 2013).

이에 아래에서는 PISA 5개 연도(2000~2012)에 모두 참여한 30개 국가들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책무성 정책의 시행이 학생들의 학업성취 수준과 학생 간 학업성취 격차와 어떠한 관련성을 맺고 있는지 살펴보았다.[2]

1 이 논단은 저자의 박사학위 논문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하여 재작성한 것임을 밝힌다.
2 본 연구는 교육책무성 정책의 평균적인 효과에 대한 분석 결과만을 제시하였음. 이에 분석모형에 포함된 통제변수들을 포함한 자세한 분석 결과는 연구자에게 문의하기 바람(sandfom3@krivet.re.kr).

2. 교육책무성 정책과 학생들의 학업성취 수준 간의 관계

〈표 1〉 교육책무성 정책과 학생들의 학업성취 수준 간의 관계 분석

	읽기	수학
교육책무성정책 시행 여부	-13.183*** (1.776)	2.256 (1.886)
R^2	0.386	0.432
관측치	1,034,874	989,782

주) *** p〈0.01, ** p〈0.05, * p〈0.10. 괄호 안은 표준오차.

이원고정효과모형(Two-way Fixed Effect Model)을 활용한 분석 결과 〈표 1〉과 같이 교육책무성 정책의 시행은 학생들의 읽기 학업성취도와 부정적인 관련성을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수학 학업성취도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과목별로 교육책무성 정책의 효과가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교육책무성 정책과 같이 국가 수준에서 시행되는 교육 정책들은 국가 내에서는 동일하고 표준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및 학생 특성에 따라 그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정동욱 외, 2012). 그리고 국제적인 차원으로 논의를 확장할 경우에도 교육정책의 효과는 해당 정책이 시행되는 국가의 특성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에 국가의 경제발전 수준에 따른 교육책무성 정책의 차별적 효과를 〈표 2〉와 같이 살펴본 결과, 수학 과목의 경우 경제적으로 덜 발달된 국가이거나 OECD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일수록 교육책무성 정책의 학업성취도 제고 효과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 경제발전 수준에 따른 교육책무성 정책의 차별적 효과 분석

	읽기 학업성취도		수학 학업성취도	
교육책무성정책 시행 여부	4.915 (22.761)	-11.677*** (2.540)	21.798*** (2.368)	17.443*** (2.976)
정책시행여부×초기 GDP	-1.894 (2.377)		-2.243*** (0.242)	
정책시행여부×OECD		-2.674 (2.828)		-24.907*** (3.119)
R^2	0.386	0.386	0.434	0.433
관측치	1,034,874	1034874	989,782	989,782

주) *** p〈0.01, ** p〈0.05, * p〈0.10. 괄호 안은 표준오차.

그리고 〈표 3〉에 따르면 읽기 과목의 경우 단위 학교의 자율성 수준에 따라 교육책무성 정책의 차별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자율성이 보장된 학교일수록 교육책무성 정책의 읽기 학업성취도 제고 효과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 단위 학교의 자율성 수준에 따른 교육책무성 정책의 차별적 효과 분석[3]

	읽기 학업성취도		
교육책무성정책 시행 여부	-19.672*** (2.661)	-16.396*** (2.146)	-17.634*** (2.532)
정책시행여부×학교자율성	14.553*** (3.061)		
정책시행여부×교육자원자율성		12.221*** (2.459)	
정책시행여부×교육과정자율성			9.178*** (2.317)
R^2	0.391	0.391	0.390
관측치	1,005,233	1,004,804	991,571

주) *** p〈0.01, ** p〈0.05, * p〈0.10. 괄호 안은 표준오차.

개인적 차원에서는 〈표 4〉와 같이 수학 과목의 경우 학생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나타내는 부모의 직업적 지위와 교육책무성 정책 변수 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모두 부적인 것으로 나타나 사회경제적인 배경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처지에 놓여 있는 학생들에게서 교육책무성 정책의 수학 학업성취도 제고 효과가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 부모의 직업적 지위에 따른 교육책무성 정책의 차별적 효과 분석

	읽기 학업성취도	수학 학업성취도
교육책무성정책 시행 여부	-10.82*** (2.278)	9.835*** (2.397)
정책시행여부× 직업적 지위	-0.020 (0.033)	-0.136*** (0.036)
R^2	0.385	0.432
관측치	985,932	942,974

주) *** p〈0.01, ** p〈0.05, * p〈0.10. 괄호 안은 표준오차.

3. 교육책무성 정책과 국가 내의 학업성취 격차 간의 관계

지금까지의 교육책무성 관련 논의는 학업성취 수준 제고라는 효과성(Effectiveness)에 주로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그러나 교육책무성 정책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책무성 정책을 통한 형평성(Equity) 문제에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특히, 교육책무성 정책이 사회경제적으로 보다 열악한 처지에 있는 학생들의 학업성취 수준 제고에 보다 효과적일 수 있음을 보여준 앞 절의 분석 결과는 교육책무성 정책이 사회경제적 배경의 차이로 인한 학생들 간의 교육격차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에 대한 보다 엄밀한 실증 분석이 필요함을 암시한다.

3 해당 분석 효과는 수학 과목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 본문에서는 생략하였음.

〈표 5〉 교육책무성 정책의 국가 내 학업성취도 격차 완화 효과 분석

	읽기 학업성취도 절대편차점수[4]		수학 학업성취도 절대편차점수	
교육책무성정책 시행 여부	-2.523** (1.243)		-2.138* (1.160)	

주) *** p〈0.01, ** p〈0.05, * p〈0.10. 괄호 안은 표준오차.

이에 〈표 5〉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교육책무성 정책을 시행하는 국가에 속한 학생의 경우 그렇지 않은 국가의 학생에 비해 읽기 과목의 경우 평균으로부터의 학업성취도 편차가 2.5점 가량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학 과목의 경우 평균으로부터의 학업성취도 2.1점 가량 적은 것으로 나타나 교육책무성 정책이 학생들 간의 학업성취도 격차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4. 맺음말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교육책무성 정책은 학생들의 읽기 학업성취도와 부정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데 반해, 수학 학업성취도와는 통계적인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세계 각국에서 시행 중인 교육책무성 정책이 국가의 평균적인 학업성취 수준 제고라는 측면에서는 의도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 결과는 각국의 교육책무성 정책이 국가 차원의 전체적인 학업성취도 및 교육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향으로 정책 설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교육책무성 정책의 학업성취도 제고 효과는 이를 시행하는 국가 및 이의 적용을 받는 학교, 학생의 특성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국가 수준에서는 경제 발전 수준이 낮은 국가에서 교육책무성 정책이 시행될 경우 학생들의 학업성취수준 제고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수준에서는 단위 학교의 자율성이 높을수록 교육책무성 정책이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향상에 보다 효과적임을 확인하였으며, 상대적으로 사회경제적 배경이 열악한 처지에 놓여 있는 학생들에게서 교육책무성 정책의 수학 학업성취도 향상 효과가 보다 정적으로(positive)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볼 때, 저개발 국가 및 개발도상국들의 경우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교육책무성 정책의 도입 및 시행이 유용한 정책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교육책무성 정책이 의도한 학업성취 수준 제고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단위 학교의 자율성 보장이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학생들에게 교육책무성 정책이 효과적이며, 실제 국가 내의 교육격차 완화에도 교육책무성 정책이 기여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사회적 취약 계층의 학생들을 위한 교육책무성 확보 노력 및 정책적 지원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교육책무성 정책의 시행이 교육격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읽기 및 수학 과목 모두에서 교육책무성 정책의 교육 격차 완화 효과가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즉,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부모의 직업적 지위에 따른 교육책무성 정책의 차별적 효과에 대한 분석 결과와 연계하여 현재 세계 각국에서 추진 중인 교육책무성 정

4 절대편차점수(Absolute Deviation Score)는 국가 평균으로부터 학생 개인의 학업성취도 거리 혹은 편차를 나타내는 값이다. 이를 종속변수로 한 회귀분석을 실시할 경우 도출된 회귀계수 추정치는 특정 국가의 학업성취도 평균으로부터 개인의 학업성취도 편차에 대한 교육책무성 정책의 효과를 나타내므로 국가 내에서의 교육격차 완화에 대한 책무성 정책의 효과로 해석할 수 있다

책이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 및 상대적으로 열악한 처지에 있는 학생들의 학업성취 수준 제고에 효과적이며, 이를 통해 학생들 간의 교육격차 완화에 일정 부분 효과적임을 알 수 있게 한다.

참고 문헌

김지은, 김지하(2012). 학력향상 중점학교 사업의 기초학력 향상 효과 분석. 초등교육연구, 25(2), 117-139.

박소영, 김준엽, 성기선(2010). 학교 책무성 기제가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분석. 교육행정학연구, 28(1), 83-102.

정동욱(2013). 초·중등교육 책무성 정책 사례의 논리와 성과 분석: 학력향상중점학교 정책을 중심으로. 김병찬, 박남기, 박선형, 변기용, 송경오, 정동욱, 최정윤(저), 한국 교육책무성 탐구 (pp. 253-307). 파주: 교육과학사.

정동욱, 박현정, 하여진, 박민호, 이호준, 한유경(2012). EBS 교육 프로그램의 사교육 경감 효과 분석: 서울특별시 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교육행정학연구, 30(3), 21-42.

Wößmann, L., Luedemann, E.,& Schütz, G., & West, M. (2009). School Accountability, Autonomy, and Choice around the world. Cheltenham, UK/ Northampton, MA, USA: Edward Elgar.

• 2016년 학회 주요 소식 •

한국교육행정학회		홈페이지 : http://www.keas.or.kr E-Mail : keas1967@hanmail.net		
학 회	주 소	(02841) 서울 성북구 안암로 145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본관 213호	전화번호	02-3290-5325
회 장	성 명	신현석(고려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전화번호	02-3290-2302
			E-mail	hsshin01@korea.ac.kr
사무국장	성 명	주영효(동국대학교-경주 교직부 교수)	전화번호	054-740-4752
			E-mail	youngmonet@dongguk.ac.kr
간 사	성 명	정수현, 장아름, 홍세영, 김혜연(고려대학교), 안지윤(중앙대학교)	전화번호	010-6444-0805
			E-mail	keas1967@hanmail.net

학술지명

교육행정학연구(The Journal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교육행정학연구』는 2015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학술지 계속평가에서 사회과학분야의 등재학술지 자격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교육행정학연구』에 많은 관심과 투고 바랍니다.

※ 올해부터 『교육행정학연구』의 발간이 연 4회에서 5회로 증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접수 및 발간일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권 · 호		논문 투고 마감일	발간 예정일
34권	1호	2016년 2월 29일	2016년 4월 30일
	2호	2016년 4월 30일	2016년 6월 30일
	3호	2016년 6월 30일	2016년 8월 31일
	4호	2016년 8월 31일	2016년 10월 31일
	5호	2016년 10월 31일	2016년 12월 31일

※ 문의 : 안지윤 편집간사(010-3866-3304, keas1967@nate.com)

국문학술지 증편 및 영문학술지 창간 안내

가. 국문학술지 〈교육행정학연구〉 연 4회에서 5회로 증편

– 논문 접수에 관한 자세한 안내는 학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관련 문의처 : 안지윤 편집간사(010–3866–3304, keas1967@nate.com)

권 · 호		논문 투고 마감일	발간 예정일
34권	1호	2016년 2월 29일	2016년 4월 30일
	2호	2016년 4월 30일	2016년 6월 30일
	3호	2016년 6월 30일	2016년 8월 31일
	4호	2016년 8월 31일	2016년 10월 31일
	5호	2016년 10월 31일	2016년 12월 31일

나. 영문학술지 〈Journal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and Policy〉 창간

– 매년 2회(8월 1일, 12월 1일) 발간 예정

– 창간호 : 2016년 12월 1일 발간 예정

– 상시 투고를 원칙으로 하며 발행일 75일 전 투고 마감(창간호는 9월 15일 투고 마감)

– 투고 시 심사료 및 게재료 면제, 영문교정비 전액 지원, 게재 시 원고료 20만원 지원

– 심사방식 및 논문작성(편집) 양식은 국문학술지와 동일

– 관련 문의처 : 홍세영 영문편집간사(010–7161–8911, keas1967@naver.com)

2016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정책포럼

1. 제2차 교육정책포럼

지난 9월 21일 한국교육행정학회는 국회 송기석의원실과 함께 “학부모·국민의 관점에서 본 대입제도의 문제점과 해법 탐색”을 주제로 제2차 교육정책포럼을 개최하였다.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진행되었으며, 200여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석하여 열띤 포럼이 진행되었다.

2. 제3차 교육정책포럼

한국교육행정학회는 한국교육개발원과 함께 9월 3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학구조개혁정책, 쟁점과 해법 탐색"을 주제로 제3차 교육정책포럼을 진행하였다.

2016 한국교육행정학회 추계학술대회

한국교육행정학회는 10월 29일 충남대학교 대덕캠퍼스에서 "한국교육행정학의 현장성 탐구"라는 주제로 추계학술대회를 진행하였다.

회원가입 및 연회비 납부 안내

가. 회원가입 : 학회 홈페이지(www.keas.or.kr)

나. 회비납부 : 학생회원(석사과정) 3만원, 정회원(박사과정 이상) 5만원, 기관회원 10만원

- 계좌번호 : 우체국 613844-01-005503 (예금주 : 한국교육행정학회)
- 신규회원인 경우 가입비 1만원 별도로 납부
- 관련 문의처 : 장아름 총무보조간사(010-4543-5624, keas1967@daum.net)

회원가입 및 회비납부 현황(2016년 7월 20일 기준)

2016년 신입회원 회비 납부명단(2016년 1월 1일 ~ 10월 31일)

강선영, 강에스더, 고삼곤, 곽주철, 구성우, 권동택, 권상순, 권은경, 권혁진, 김경숙, 김영애, 김민경, 김민규, 김본영, 김성중, 김솔, 김승희, 김연주, 김영재, 김유원, 김정민, 김정원, 김주경, 김창용, 김화영, 김현주, 김현철, 김형욱, 김희란, 김희성, 남궁지영, 도승이, 모화숙, 문영진, 민수빈, 민천홍, 박영주, 박유미, 박은정, 박효원, 박흥원, 서재영, 서화정, 송경하, 신범철, 신영수, 신혜숙, 심정연, 안수진, 오예진, 오유진, 오헌석, 우허난, 원유림, 유은지, 윤유진, 윤초희, 이경오, 이기호, 이수경, 이예슬, 이용주, 이은정, 이이찬, 이종욱, 이주희, 이진솔, 임국화, 임예진, 임은옥, 임재욱, 장귀덕, 장명희, 장민희, 장이선, 정선희, 정양순, 정예화, 정유리, 정현숙, 조영찬, 조진한, 주영달, 진동섭, 차명진, 최영휴, 최윤호, 하동엽, 한상윤, 한신희, 홍정순, 황석, 황은희, 황재운, Ganbold Usukhbayar

2016년 기존회원 회비 납부명단(2016년 1월 1일 ~ 10월 31일)

가신현, 강기남, 강은숙, 강재혁, 강호수, 고득환, 고병면, 고장완, 고전, 곽경희, 권성찬, 권순형, 권초아, 김갑성, 김경민, 김관래, 김규태, 김근진, 김도기, 김명수, 김미정, 김민조, 김민희, 김병찬, 김상철, 김세령, 김세정, 김양분, 김영식, 김왕준, 김용관, 김용남, 김용일, 김용, 김용갑, 김용주, 김윤진, 김은정, 김인희, 김장래, 김정현, 김지선, 김지현, 김지혜, 김한나, 김현숙, 김현진, 김혜진, 김효진, 김희규, 나민주, 나임, 남미자, 남해진, 노영자, 라은종, 려군, 류명혜, 류민영, 류윤석, 문영빛, 문찬주, 민경준, 민병제, 박경호, 박균열, 박대권, 박상완, 박선주, 박선형, 박세훈, 박수미, 박수연, 박수정, 박영숙, 박영휘, 박예진, 박종필, 박주미, 박주형, 박해경, 박희진, 반상진, 방인자, 배상훈, 배지혜, 백규호, 백정하, 백종면, 변수연, 서경화, 석혜정, 성삼제, 손경애, 송경오, 송명화, 신민정, 신붕섭, 신상명, 신유식, 신재성, 신재흡, 신정철, 신철균, 신하균, 신현석, 신혜진, 심연식, 심정연, 안선회, 안성주, 안영선, 안영은, 양윤정, 엄문영, 엄준용, 염민호, 오경희, 오미향, 오범호, 오예진, 우명숙, 우선영, 위은주, 유경훈, 유길한, 유재환, 유지은, 유현숙, 윤권수, 윤기현, 윤소희, 윤정, 윤정인, 윤지희, 윤홍주, 이경옥, 이경호, 이규영, 이낙종, 이동엽, 이동화, 이미심, 이병식, 이상문, 이상철, 이상헌, 이선아, 이승연, 이승호, 이아진, 이영내, 이영만, 이영철, 이윤식, 이은진, 이은화, 이인수, 이인회, 이일용, 이재덕, 이정진, 이정화, 이제봉, 이지영, 이치호, 이창열, 이필남, 이현서, 이형빈, 이혜미, 이호준, 이효미, 이희숙, 임성범, 임소현, 임연기, 임우섭, 임채안, 장훈, 전경애, 전병식, 전수빈, 전승희, 전재은, 정기오, 정대범, 정동욱, 정묘진, 정성수, 정수현, 정원숙, 정재균, 정재안, 정제영, 정주영, 정현주, 조미애, 조영재, 조영하, 주철안, 주현준, 지연정, 차성현, 채재은, 채정관, 최경준, 최광원, 최상영, 최선향, 최윤정, 최정윤, 최준열, 하정윤, 한대동, 한상연, 한유경, 허경일, 홍성철, 홍지인, 홍창남, 황윤한, Chen Peng, Tanaka Mitsuharu

2016년 이사회비 납부명단(2016년 1월 1일 ~ 10월 31일)

김도기, 김병주, 김병찬, 김이경, 김희규, 박선형, 박영숙, 변기용, 배상훈, 신재흡, 신철균, 이정기, 전제상, 조남두, 조석훈, 조영하, 최창섭

2016년 기관회원 회비 납부명단(2016년 1월 1일 ~ 10월 31일)

가톨릭대학교 도서관, 거제대학교 도서관, 경기도교육연구원, 광주교육대학교 도서관,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남서울대학교 도서관, 영남대학교 도서관, 전북교육연구정보원, 전주교육대학교 도서관, 한국교원대학교 도서관, 한국사학진흥재단, 합동군사대학교

학술지 논문게재 안내

▣ 원고접수 : 수시 접수체제로 운영(홈페이지 접수)

권 · 호		심사접수 마감일	발간예정일
제34권 (2016)	1호	2월 29일	4월 30일
	2호	4월 30일	6월 30일
	3호	6월 30일	8월 31일
	4호	8월 31일	10월 31일
	5호	10월 31일	12월 31일

▣ 논문 심사 적부 판정

논문 본 심사에 앞서 '교육행정학' 논문에 대한 적부심사를 편집위원회에서 거칠 예정('적' 으로 판정되면 논문 심사 진행, '부' 로 판정되면 심사비 환불 및 심사 진행 불가)

▣ 원고분량

① A4용지 20페이지(참고문헌, 영문초록 포함)
② 이를 기준으로 20페이지를 초과할 수 없으며, 20페이지 초과 시 1페이지 당 2만원 추가
③ 규정개정으로 인하여 최대 30페이지를 초과하는 논문은 접수하지 않음

▣ 심사료 : 100,000원(외국어 논문 심사료 150,000원)

▣ 게재료

① 입금시기 : 심사결과 '게재가' 로 결정된 후에 입금
② 게 재 료 : 연구비 수혜를 받아서 게제된 논문은 400,000원 이상
연구비 수혜 없이 작성된 논문은 200,000원 이상
③ 납부방법 : 학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카드결제 또는 계좌이체
- 입금계좌 : 우체국 613844-01-005503(예금주 : 한국교육행정학회)

▣ 기타 : 접수 마감 당일 자정까지 접수하며 기한을 넘긴 논문은 다음 호 심사로 이관됨

- 관련 문의처 : 안지윤 편집간사(010-3866-3304, keas1967@nate.com)

※ 연회비를 납부하시고도 위 명단에 기재가 되지 않은 경우, 학회 사무국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뱅킹을 이용한 연회비 납입 시 반드시 '성명' 과 '연회비' 로 기재하여 이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연회비 납부계좌 : 우체국 613844-01-005503(예금주 : 한국교육행정학회)
※ 10월에 있을 부회장 선거에는 2015년 회비 및 미납회비가 없는 회원만 선거권이 주어집니다. 선거권을 행사하실 회원님께서는 회비납부현황을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 뉴스레터 온라인 전환 안내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여 금호(제122호)부터 뉴스레터는 온라인으로만 발간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이해를 부탁합니다.

회원주소 및 연락처 정비

- 인적사항에 변동이 있으신 회원님께서는 홈페이지 개인정보를 수정하신 후에 학회 메일(keas1967@hanmail.net)이나 홈페이지 질의응답에 글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 학회에서 안내해 드리는 각종 소식이나 메일이 도착하지 않는 회원님들께서는 학회 홈페이지(www.keas.or.kr)에 접속하셔서 설정해 놓은 이메일 주소를 확인하신 후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학회 메일(keas1967@hanmail.net) 또는 홈페이지 질의응답에 글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학회비 납부 안내

- 본 학회 회칙 제9조 회원의 자격상실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2년 이상 학회비를 미납한 경우 회원자격이 상실됩니다. 아울러 회비가 2년 이상 연체된 회원들은 학회 홈페이지 내 자료 접근이 제한됩니다. 자격 회복을 원하시는 경우 학회 회칙 제9조 내지 제10조를 참조하시고 사무국(010-6444-0805)으로 연락바랍니다.
- 학회 회비가 연체된 경우는 학회 회원으로 누릴 수 있는 어떠한 권한(학회지 배송, 학회지 투고, 소식지 동향 기재, 부회장 투표권 등)도 부여되지 않습니다. 연체된 회비는 학회 홈페이지 로그인 후 '결재정보확인' 버튼을 누르면 확인할 수 있으며, 연체된 내역은 개인 메일이나 유선전화로 개별 통보해 드리지 않습니다. 또한 연회비, 학회 논문 심사비 및 게재료는 학회 홈페이지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 연회비 안내

- 입회비 : 10,000원
- 연회비 : 일반회원 50,000원, 학생회원 30,000원, 기관회원 100,000원
- 회비납부 계좌 : 우체국 613844-01-005503 (예금주 : 한국교육행정학회)
- 학회 홈페이지(www.keas.or.kr)에서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

2016년 제44대 한국교육행정학회 사무국 주소 및 전화번호

- 주　소 : (02841) 서울 성북구 안암로 145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본관 213호
- E-mail : keas1967@hanmail.net
- 전화번호 : 010-6444-0805
- 회　장 : 신현석 (고려대학교)
- 부회장 : 주철안 (부산대학교)
- 사무국 : 사무국장 주영효 (동국대학교)

  총무간사 정수현 (010-6444-0805) keas1967@daum.net

  편집간사 안지윤 (010-3866-3304) keas1967@nate.com

제44대 한국교육행정학회 임원

▣ 회장단

- **회　장** : 신현석(고려대학교)
- **부 회 장** : 주철안(부산대학교)
- **감　사** : 이석열(남서울대학교), 김민희(대구대학교)

▣ 이사회

- **당연직 위원 34명**

김영식, 신극범, 김재범, 신철순, 정태범, 김명한, 남정걸, 이형행, 강영삼, 윤정일, 신중식, 곽영우, 최희선, 한경수, 김신복, 주삼환, 이종재, 서정화, 노종희, 강무섭, 강인수, 정진환, 박종렬, 정영수, 김명수, 신재철, 송광용, 임연기, 허병기, 이윤식, 박세훈, 김성열, 신현석, 주철안

- **선임직 위원 61명**

강경석(인하대), 고 전(제주대), 김 용(청주교대), 김갑성(교원대), 김규태(계명대), 김남순(조선대), 김도기(교원대), 김동석(한남대), 김병주(영남대), 김병찬(경희대), 김왕준(경인교대), 김이경(중앙대), 김인희(교원대), 김재웅(서강대), 김현진(국민대), 김혜숙(연세대), 김홍주(KEDI), 김희규(신라대), 나민주(충북대), 남수경(강원대), 박남기(광주교대), 박상완(부산교대), 박선형(동국대), 박영숙(KEDI), 박종필(전주교대), 박주호(한양대), 반상진(전북대), 배상훈(성균관대), 변기용(고려대), 송경오(조선대), 송기창(숙명여대), 신상명(경북대), 신재흡(한성대), 신정철(서울대), 신철균(KEDI), 안선회(중부대), 양성관(건국대), 양정호(성균관대), 오세희(인제대), 오영재(고려대), 유현숙(KEDI), 이명주(공주교대), 이병환(순천대), 이수정(단국대), 이정기(백석대), 이차영(한서대), 조홍순(중부대), 장덕호(상명대), 전제상(공주교대), 정성수(대구교대), 정수현(서울교대), 조남근(세명대), 조남두(신구대), 조석훈(가천대), 조영하(경희대), 차성현(전남대), 천세영(충남대), 최준렬(공주대), 최창섭(강릉대), 한유경(이화여대), 홍창남(부산대)

▣ 분과위원회 구성

- **기획·홍보위원회**

- 위원장 : 고전(제주대)　　- 부위원장 : 김갑성(교원대)
- 위　원 : 김성기(협성대), 김순남(KEDI), 박인심(서울여대), 백정하(대교협), 이덕난(국회입법조사처), 이차영(한서대), 차성현(전남대), 황준성(KEDI)

- **학술위원회**

- 위원장 : 김병찬(경희대)　　- 부위원장 : 송경오(조선대)
- 위　원 : 김가신현(고려대), 김민조(청주교대), 김왕준(경인교대), 김현진(국민대), 박대권(성균관대), 박수정(충남대), 신철균(KEDI), 유경훈(광주교육정책연구소), 유길한(진주교대), 이길재(충북대), 정동욱(서울대)

- **편집위원회**

- 위원장 : 김이경(중앙대)　　- 부위원장 : 이석열(남서울대)
- 위　원 : 고장완(성균관대), 박균열(KEDI), 반상진(전북대), 우명숙(한국교원대), 이재덕(KEDI), 이혜미(국가평생교육진흥원), 전제상(공주교대), 정성수(대구교대), 정제영(이화여대), 채재은(가천대)

- **영문편집위원회**
  - 위원장 : 이수정(단국대) - 부위원장 : 김용련(한국외대)
  - 위 원 : 김근진(서울대), 박혜영(고려대), 변수연(부산외대), 서재영(충북대), 엄문영(경인교대), 오예진(영남대), 이길재(충북대), 전재은(세명대), 주현준(대구교대), 허주(KEDI)
- **국제학술위원회**
  - 위원장 : 박선형(동국대) - 부위원장 : 박소영(숙명여대)
  - 위 원 : 박삼철(단국대), 전수빈(동국대), 정바울(KEDI), 조영하(경희대), 주동범(부경대), 황윤한(광주교대)
- **학회발전위원회**
  - 위원장 : 조석훈(가천대) - 부위원장 : 김민희(대구대)
  - 위 원 : 김근진(서울대), 김훈호(KEDI), 박주형(경인교대), 박창언(부산대), 박호근(한국체대), 엄문영(경인교대), 이태상(상지대), 장덕호(상명대)
- **대외협력위원회**
  - 위원장 : 김병주(영남대) - 부위원장 : 변기용(고려대)
  - 위 원 : 강석(광주교육정책연구소), 박엘리사(숭실대), 서지영(대교협), 서화정(영남대), 윤기현(KICE), 이쌍철(KEDI), 채정관(감사원), 최원석(충북대), 한상윤(서울시학생교육원)
- **조직·규정위원회**
  - 위원장 : 김희규(신라대) - 부위원장 : 유평수(전주대)
  - 위 원 : 김경윤(중앙대), 김한나(KEDI), 류춘근(서울과학기술대), 이병환(순천대), 이원근(평생교육진흥원), 이준희(영동대), 정금현(교육부)
- **재정·기금위원회**
  - 위원장 : 나민주(충북대) - 부위원장 : 박수정(충남대)
  - 위 원 : 김지하(KEDI), 남수경(강원대), 송선영(대교협), 신정철(서울대), 오범호(경남대), 이병식(연세대), 이미라(영남대), 정재균(전북교육정책연구소)
- **학술편찬위원회**
  - 위원장 : 박상완(부산교대) - 부위원장 : 홍창남(부산대)
  - 위 원 : 김용(청주교대), 김홍섭(전 교육부 · 독산고), 양성관(건국대), 염민호(전남대), 유길한(진주교대), 이기성(서울사대부고), 이명숙(서울종암초), 장덕호(상명대), 전상훈(고려대)
- **윤리위원회**
  - 위원장 : 신재흡(한성대) - 부위원장 : 신붕섭(나사렛대)
  - 위 원 : 구희완(그리스도신학대), 권동택(교원대), 김기선(인천광성중학교), 배상훈(성균관대), 엄준용(중부대), 이두영(인천대), 이정기(백석대)
- **정책연구위원회**
  - 위원장 : 오세희(인제대) - 부위원장 : 이인회(제주대)
  - 위 원 : 권혁진(한림공고), 김무영(경운대), 김정희(대교협), 박상욱(동의대), 이일권(서울휘봉초), 이필남(홍익대), 장환영(동국대), 하정윤(순천제일대)

- **포럼운영위원회**
  - 위원장 : 안선회(중부대) - 부위원장 : 손희권(명지대)
  - 위 원 : 김수경(평택대), 김영식(KRIVET), 김지영(극동대), 김현진(국민대), 노명순(여의도연구원), 이경호(고려대), 이준희(영동대), 주휘정(KRIVET), 하봉운(경기대)
- **부회장선출위원회**
  - 위원장 : 신상명(경북대) - 부위원장 : 김도기(한국교원대)
  - 위 원 : 김갑성(한국교원대), 김규태(계명대), 김왕준(경인교대), 박종필(전주교대), 신철균(KEDI), 양성관(건국대), 전제상(공주교대), 차성현(전남대)
- **소석논문상위원회**
  - 위원장 : 남정걸(단국대) - 부위원장 : 강영삼(국민대)
  - 위 원 : 강무섭(강남대), 강인수(수원대), 노종희(한양대), 신중식(국민대), 신현석(고려대), 이종재(서울대), 주삼환(충남대)

▣ 사무국

- **사무국장** : 주영효(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 **총무간사** : 정수현(고려대학교), 장아름(고려대학교)
- **편집간사** : 안지윤(중앙대학교)
- **영문학술지 편집간사** : 홍세영(고려대학교)
- **포럼간사** : 김혜연(고려대학교)

한국교육행정학회 윤리 헌장

한국교육행정학회 윤리헌장은 회원이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윤리적 원칙과 기준을 정하여 본 학회는 물론 회원 개인의 윤리성을 고양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다음의 대용을 준수해야 한다.

1. 회원은 학회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성실하게 의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회원은 학회 활동을 통하여 교육행정학과 한국교육행정의 발전에 기여하고 공익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3. 회원은 학술활동 관련 법률 및 학회 윤리규정, 학계에서 권장하는 기본적인 연구 학술 윤리를 준수하여야 한다.
4. 회원은 타인의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하지 아니하며, 타인의 저작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5. 연구관련 심사 및 자문을 하는 회원은 학문적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제출자와 제출내용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6. 회원은 연구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이득을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7. 회원은 연구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8. 회원은 학술활동 관련 연구대상자 및 연구보조자의 인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2007. 4. 27

한국교육행정학회